

종합·해설



이곳이 뜨겁다 ▶ 광주 서구을

당이나 인물이냐… “이젠 변해야”

■ 민심 들어보니

“출마 후보가 4명인데, 당을 보고 찍어야 할지 아니면 인물을 보고 찍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현재 광주 서구을 유권자들의 민심이다. 광주·전남지역 다른 선거구에 비해 민주통합당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약한 서구을 선거구는 ‘새누리당 대 애권연대’ 후보가 박빙의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다.

무소속 후보의 약진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아권연대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잡음으로 기준 정당에 염증을 느낀 일부 유권자들의 표심이 무소속으로 쏠리고 있어서다. 한마디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절은 안개 속이다.

지난 1일 오후 3시께 서구 풍암동 풍암호수공원. 각 후보들의 흥보 현수막이 여기저기에 내걸린 가운데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이름	이정현(53·새)	오명윤(54·통)	이점자(51·정)	정남준(55·무)
기호	1	4	6	7
주요 경력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서구 장난김도서관장	전 국립 철현대 강사	전 행정안전부 차관
주요 공약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아이아이 창작공간 건립 ·장애인체육관 건립 ·증강공학 국가공원화	·골목상권 보호 육성 ·반값등록금 실현	·고교 의무교유, 급식 ·서구 멘토링스를 설립	·스마트광주 2020 프로젝트 추진 ·출산·육아지원 확대 ·우수명문고 육성

※ 새=새누리당, 통=통합진보당, 정=정통민주당, 무=무소속

이곳에서 만난 김도(47·풍암동)씨는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호남 예산지킴이를 자처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 아니나”라며 “이번 총선에선 정당보단 인물을 보고 투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광주가 민주통합당 텃밭인데, 유권자들이 인물을 보고 선택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유권자들은 이 후보의 인물 됨됨이

와 의정활동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새누리당 후보라는 점에 선 고개를 가우뚱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애권연대 단일후보를 내세운 데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도 엇갈렸다. 애권연대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서대석 후보가 지난 28일 오병윤 후보 지역을 선언하며 사퇴한 직후 오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관측이지만

아직 표심을 확실히 정하지 못한 시민들도 많았다.

시민 박도(53·서구 풍암동)씨는 “서구는 광주지역 다른 선거구에 비해 민주통합당 지지층이 약한 지역이지만 그래도 지지층이 많다. 시민들이 민주통합당을 응하고 있긴 하지만, 투표 당일엔 애권연대 후보를 찍지 않겠느냐”라며 “다만, 예전처럼 무조건 찍어주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서구을 민심은 제대로 가늠하기 어려웠다. 민주당 텃밭인 탓에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이 크지만, 민주통합당에 대한 믿음도 그리 커보이진 않았다.

이모(37·서구 금호동)씨는 “차라리 무소속 후보가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지역 정치인들이 광주발전을 위해 한 게 뭐가 있느냐”라며 “주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이번 총선에선 ‘바꿔 보자’는 의식이 강하다”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교육·일자리 초점

오병윤 급상승세…이정현과 ‘박빙’

■ 공약과 쟁점

광주 서구을 선거구에 나선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은 교육·보육 정책과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친환경 도시 조성사업 등이다.

각 후보들은 교육국제화특구 육성을 포함한 국·공립보육시설 30% 확대, 무상공공간후조리원 설치, 공공기관 채용목표제 시행확대, 여성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창업지원 등을 내세웠다.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대규모 접포 허가제 운영,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약도 포함됐다. 주민들의 최대 관심은 교육·보육정책과 일자리에 쏠려 있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해 현실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후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 애권연대 결정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잡음으로 기준 정당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의 표가 새누리당으로 쏠리면서 서구을은 ‘새누리당 대 애권연대’ 대결 구도로 가는 흐름이다.

‘호남 예산 지킴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이 후보는 당내에서 호남인으로서 당을 변화시키고 호남정신을 전달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 들고 있다. 반면, 애권연대 단일후보인 오 후보는 현 정권 심판론과 정권교체론을 제시하면서 이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www.hshi.co.kr

■ 판세 및 변수

민주통합당 텃밭에서 ‘새누리당 대 애권연대’ 후보 간 박빙의 대결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광주 서구을 판세에 변화가 예상된다. 애권연대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한 후보가 사퇴하고 애권연대 후보 지지를 맡게 된 때문이다.

출마 후보는 이정현(새누리당)·오병윤(통합진보당)·정남준(무소속)·이점자(정통민주당) 후보 등 모두 4명이다.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새누리당이 후보와 애권연대 단일 후보인 오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지난 달 24~25일 실시된 광주일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34.5%의 지지를 얻어 30.8%에 그친 오 후보를 오차범위 내인 3.7% 포인트 앞섰다. 이어 무소속 서대석 후보 14.4%, 정 후보 8.7%, 정통민주당이 후보 3.7% 순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20일(10.6%), 2월 15일(3.3%) 광주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높지 않았지만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애권연대 지역으로 분류된 뒤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오 후보도 애권연대 후보로 나선 직후 초반 열세(1월 20일 8.3%, 2월 15일 6.4%)를 극복하고 지지율이 급 상승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달 28일 무소속 서 후보가 사퇴하고 오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판세가 요동치 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 후보의 지지선언이 오 후보 층에 ‘호재’로, 이 후보 층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조선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오 후보가 27.9%의 지지율로 27.1%를 얻은 이 후보를 오차범위(±4.4% 포인트) 내인 0.8%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 예산 지킴이’를 자처하는 이 후보는 유권자 접촉을 늘리고 정책 위주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이 이명박 정권·새누리당 심판론과 정권 교체론으로 맞서면서 이 후보가 초반 예상보다 다소 어려운 선거를 치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말 대선 전초전 성격의 여·야 대결 구도 속에 막판 변수도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간 애권연대 결정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잡음으로 기준 정당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의 표가 무소속 후보에게 쏠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낸 정 후보는 ‘스마트 광주 2020 프로젝트’를 마련,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과 시민 경제 활성화대책을 제시하면서 표심을 파고 들고 있다.

뒤늦게 합류한 정통민주당이 후보로 옛 민주당 지지자들을 상대로 표밭을 다지기기에 나서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드릴십 해상플랫폼 설치가 어려운 삼해지역이나 파도가 심한 해상에서 원유를 밭굴하는 시추선



불법사찰 규탄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주요 후보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青, 불법사찰 비열한 물타기”

참여정부 출신 조영택·문재인 후보 “이명박 대통령 사죄하라”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조영택(광주 서구 갑) 후보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부산 사상구) 후보는 2일 “참여정부 시절에도 민간인·정치인 사찰이 있었다는 청와대 주장을 전혀 사실이 아니며, 현 정권의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기획수석조정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무소속 조영택 후보는 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참여정부 민간인 사찰’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인 정치적 음해공작”이라며 “민주개혁진영 음해하는 정치공작 중단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공직기강과 공직자 감찰업무의 실무 책임자로서, 참여정부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실제로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MB정부의 주장과 같이 ‘참여정부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기꺼이 질 것”이라며 “불법적인 범죄행위가 드러난 이명박 정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1일 부산 김해 연지공원에서 기자

조사심의관실에 근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자료 내용도 일선 경찰의 정보 보고를 취합한 것으로서 정보 경찰들이 당연히 해야 할 직무들”이라며 “결국 청와대의 주장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열한 물타기”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기원기자 cki@kwangju.co.kr

“日 만령

- 김종우



이젠 귀에 딱지가 앓았다



FPSO 부유식원유생산장치 하역설비. 해양 플랜트나 드릴십에서 뽑아낸 원유를 정제하고 이를 저장해서 셔틀탱커나 기타 이송장소에 하역할 수 있는 특수 선박(2007년 인도)



조선해양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합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드릴십과 FPSO 등 해양사업을 확대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과 기술개발로 조선해양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 현대삼호중공업